

## 문체부·농협중앙회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 추진

통합특별법 국회 발의 앞두고 '공공기관 2배 배정' 파격 특례 포함

문화·농업 중심지 도약 의지…수도권·타 지역 형평성 논란 넘어야

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정부 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품어 명실상부한 '남부권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3·5면>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28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양 시·도는 법안 제395조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지난 15일 공개된 초안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양 시·도가 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권한을 최대한 충족하게 차운 넓은 결과다.

◇문체부 등 중앙부처,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도 명시=이번 법안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눈에 띄는 항목은 단연 '중앙부처 이전'이다. 수정안은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특별법을 통해 특정 중앙부처의 이전을 못 박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다.

이 같은 조항은 광주와 전남이 가진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정부 부처 이전 내용은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해 온 광주시의 인프라와 문체부의 행정력이 결합할 경우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막대한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최대 농도(農道)인 전남도에 농식품부가 등지를 풀게 되면, 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과 함께 '농생명 산업 수도'로의 도약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부처 이전과 함께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제398조)도 법안의 핵심 측면을 담당한다.

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특별시에 두도록 강제했다. 금융과 유통망을 원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혈맥을

뚫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이전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배정=일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역대급' 특례가 적용됐다. 제397조는 국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통합특별시에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초안이 '우대 배정'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배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부의 재량권을 차단했다.

수정안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 재용 비율 외에, 통합 특별시만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해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통합 시 청년들의 공공 기관 취업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추가 이전할 때 통합 시장이 요구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나눠주기식' 배정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해 꼭 필요한 기관을 통합 시장이 직접 선택해서 가져오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법안에는 국립김산업진흥원,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수협중앙회 등 지역 특화 기관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도 했다.

이처럼 양 시·도가 법안에 '최대치'의 요구사항을 담아낸 것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벌어질 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법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광주·전남은 행정과 재정,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수정안은 특별시 설치일부터 3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 기관에는 이주수당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특별시 인재 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해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 법위를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시 관할구역 전체'로 확대해, 도심 내 공공기관 유치 걸림돌을 제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 부처 이전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문체부와 농식품부 같은 핵심 부처의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타당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옛 전남도청 '5·18 총탄 자국'

옛시설 복원 공사를 마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본관 외벽에 1980년 당시 새겨진 총탄으로 의심되는 탄흔 20개(원 안)가 남아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총탄 의심 흔적 중 탄흔으로 확인된 지점 15곳에는 빨간 색, 탄흔으로 의심되는 지점에는 노란 색 표시를 해 오는 4월 5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지방선거 공관위에 국회의원 배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도 당원투표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도 선출도 당원투표로 전환하면서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공천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

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반면, 공관위 추천 권한과 선임 과정에 지역위원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시도당 공

관위에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인 기준에서 구성됐다"며 "민주당이 최근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사안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공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3개 혐의 중 1개 혐의만 유죄 인정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여사에게 1281만 5000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

안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법 기관은 알선 목적으로, 그래프 목걸이는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며 "뒤늦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데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 전남 행정통합

더 당당한 자치! 더 거대한 경제! 더 특별한 내일!  
행복한 동행의 시작

